

택시기사 없어 4대 중 1대 ‘스톱’...대중교통 불편 ‘악순환’

광주 택시기사 5년간 11%나 줄어...운행건수도 전년보다 5.42% 줄어 60세 이상 운전자 택시 65.3%·버스 41.3%로 급증하며 고령화 심각 경영난에 서비스 질 하락도...악화일로 대중교통 근본 대책 마련 절실

광주 지역 대중교통인 버스와 택시운전자 수가 구하기 하늘에 별따기 가 됐다. 대중교통 운전기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운행 건수까지 줄어 광주시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가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정책을 바탕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대중교통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가 최근 2024년 상반기(1~6월) 택시 서비스를 평가한 결과 택시 운행 건수는 전년 대비 5.42% 줄어 들었다. 법인택시 거래 건수는 2023년 상반기 7445건에서 올해 상반기 6939건으로 7% 감소했으며, 개인

택시는 2023년 상반기 1만 965건에서 올해 상반기 1만 473건으로 4% 줄었다. 같은 기간 법인택시 기사 수도 2023년 2583명에서 1년만에 2533명으로 줄었으며, 개인택시 또한 4786명→4781명으로 감소했다. 택시기사 감소세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9년 기준 택시 기사는 8224명에 달했으나, 5년 새 7314명으로 11.0% 감소한 것이다. 현재 광주 법인택시 총 면허대수는 3334대로, 택시 차량 수의 75%밖에 충전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택시 4대 중 1대는 기사가 없어 차고지에서 주차만 돼 있는 상황이다. 광주 지역 택시기사들은 일이 힘들고 연료비 상승

과 매출 감소로 수입이 줄다보니 이직자가 증가해 차량 가동률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진단한다. 광주시의 택시에 대한 지원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도 택시기사 층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관동규 광주시택시운송사업조합 총무국장은 “광주에서는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로 한달 10여만 원 중 34%(3만원)만 지원해주고 있는데, 울산, 대구, 대전은 시에서 카드 수수료를 100% 보전해주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며 “광주시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를 위한 인센티브도 한 달 5만원 수준으로 주고 있는데, 인천 등지에서 15만원까지 주고 있는데 비해 터무니없이 열악하다”고 강조했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지난 2022년부터 국토부가 2022년 11월 택시부채(강제 휴무제)를 해제했는데, 법인택시는 임금 등 문제로 사실상 6부제를 유지하고 있어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시내버스 또한 비슷한 상황이다. 기사 수는 줄고

고령화가 심해진다 적자까지 눈덩이처럼 불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에서는 현재 10개 업체, 101개 노선 999대의 시내버스가 운행 중이다. 이 중 버스기사 수는 2019년 3590명에서 2023년 3464명으로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가 매년 시내버스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투입하는 비용도 2019년 733억원, 2020년 1189억원, 2021년 1221억원, 2022년 1393억원, 2023년 1424억원으로 늘고 있다. 신규 운전자 유입이 줄어들면서 60세 이상 버스 운전자 비율은 2019년 34.2%에서 2023년 41.3%로 늘었으며, 60세 이상 택시운전자 비율도 2019년 49.6%에서 2023년 65.3%로 폭증했다. 버스, 택시의 경영난은 서비스 질 하락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법인택시에 대한 교통불편신고 접수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265건에서 올해 상반기 243건으로 줄었으나, 행정처분 건수는 91건→109건으로 도리어 증가했다.

시내버스 교통불편신고 접수 건수도 2022년 1043건, 2023년 965건, 2024년 9월까지 368건 등 3년여간 2376건 접수됐으며, 행정처분 건수도 2022년 251건, 2023년 171건, 2024년 9월까지 75건 등 497건에 달했다. 대중교통 기사들은 현재 광주시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버스 적자 보전, 서비스 개선 등을 넘어 기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토부 광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택시 기본요금도 수도권·부산에 비해 500원 적고, 할증 시간도 1~2시간 늦는 등 대중교통 기사들은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정책은커녕 대중교통 기사들에 대한 별다른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려면 그 바탕인 법인·개인택시, 시내버스 기사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순천 묻지마 살인’ 박대성 일부 혐의 부인

첫 재판서 살인 혐의는 인정

순천 도심에서 ‘묻지마 범행’으로 1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박대성(30)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다만 “추가 범행을 하려 한 것은 아니다”며 살인 예비 혐의는 부인했다. 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 심리로 순천지원 316호 법정에서 살해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박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0시 40분께 순천시 한 병원 주차장에서 친구를 배웅하고 귀가하던 A(17)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새벽 0시 50분께 다른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소지하고 주점과 노래방을 돌아다니던 혐의로도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범행 후 흉기를 소지한 채 1시간여 동안 술집과 노래방 등지를 배회하며 추가 범행 대상을 모색한 사실을 들어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

했다. 애초 경찰은 살인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한 결과 범행직전 흥기를 촬영한 사진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우발적 살인은 아니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날 박씨 측은 “살인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나, 살인예비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세부적으로 다른 내용은 있지만, 잘못은 인정한다”며 “2차 살인 목적에 대해서는 살인을 하려고 갔는지는 알지 못하고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A양 측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정의가 구현되길 원한다”며 “재범 위험성 등에 비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A양 친구들도 같은 취지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다음 재판은 순천지원에서 다음달 26일 열린다. /순천=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쌀값 보장하라” 나락 야적 투쟁 영암군농민회 등은 5일 오전 영암군 농협 영암군지부·영암군청 앞에서 ‘나락 야적 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여수 지인 살해 60대, 돈 훔치려다 들키자 범행

심야에 7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60대(11월 5일 자 광주일보 6면)가 금품을 훔치려다 들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경찰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A씨에 대해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밤 11시 10분께 여수시 한 주택 거실에서 B(여·76)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는 당초 살인 혐의가 적용됐지만, 금품을 훔치기 위해 침입했다가 B씨와 마주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자 경찰

은 적용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선원으로 일하던 A씨는 경찰조사에서 “최근 건강이 악화해 직업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B씨 가족이 서랍에 최소 10만원 이상을 넣어둔다는 사실을 기억해 훔치려 몰래 들어갔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 가족이 평소 전기계량기 위에 놓아둔 열쇠를 이용해 집안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현장 인근 풀숲에 버려져 있는 범행도구를 확보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혜원 기자 hey1@

“대표이사가 징계위원회에게 직원 해고 지시는 위법”

전 해양에너지 직원 해고무효 승소

대표이사가 징계위원회에게 징계 대상자에 대한 양형(해고)을 직접 지시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주식회사 해양에너지 전 직원 A씨가 해양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양에너지 측에 A씨를 해고한 2022

년 5월부터 복직시까지 월 37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회사는 인턴사원들이 2022년 4월 사측에 A씨의 비위를 제보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면직의 결정과 같은해 5월 19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사측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재차 면직 통보를 받았다. 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해고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당시 대표이사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이뤄져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징계위원회에게 ‘다른 징계위원회에게 대표이사의 뜻이니, 면직으로 투표하라’는 뜻을 전달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징계처리 지침에 정해져 있는 무기명 비밀투표와 양정에 관한 토론 금지 조항이 있고 이는 징계위원 각자의 자유로운 독립적 징계양정을 보장하는 취지”라면서 “징계권자인 당시 대표이사가 양정에 관여한 것은 징계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